
정책참고자료

2018-14호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실)



목 차



1 행정안전부

학교 밖 청소년 권리, 청소년 인권이 지켜지는 사회 만들어요

_____ 4

- "청소년이 있는 대한민국" 주제로 '제8차 열린소통포럼' 개최 -

2 국민권익위원회

장애인거주시설 등 복지시설의 의료서비스 제공 투명해진다

_____ 8

- 국민권익위, '촉탁의사 근무시간 기준, 표준협약서, 지도·점검
규정' 마련토록 보건복지부에 권고 -

3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 최저임금 애로 겪는 외식업 소상공인들과 간담회

_____ 12

- 최저임금으로 어려워하는 외식업 소상공인의 현장목소리 청취 -

4 교육부

직업계고 현장실습 지도·점검 강화한다

_____ 15

- 공인노무사, 산업안전 전문가 동행
원스톱 상담신고, 전문적 법률지원을 통한 피해학생 권리구제 -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기업 청년 과학기술인들 사기진작을 위한 간담회 개최

_____ 18

- 판교 (주)원스 기업부설연구소에 방문하여 현장 의견 수렴 -

6 문화체육관광부

관광 분야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을 위한 간담회 개최

_____ 19

- 8. 1. 유원시설업계, 8. 3. 여행업계, 8. 9. 호텔업계 간담회 이어져 -

7 농림축산식품부

농정 역량강화 교육을 정책집행 파트너까지 확대!!

_____ 22

- 농식품공무원교육원'유관기관 관리자 역량강화 과정'운영 -

8 환경부

- 안전하고 차별없는 환경미화원 노동환경을 만들겠습니다.** _____ 26
-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방안 마련 -

9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 마련** _____ 30
- 청소·경비용역 사업장과 백화점·면세점 등 취약사업장 중심으로
9월부터 실태점검 실시키로 -

10 여성가족부

- 방과후아카데미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재로 성장합니다!** _____ 32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창의융합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11 국토교통부

- 저소득 가구 부양가족 있어도 10월부터 주거급여 받는다** _____ 37
- 중위소득 43% 이하 가구 대상 8월 13일부터 사전 신청...10월부터 지급 -

12 해양수산부

- 성공적인 귀어·귀촌, 이 곳에서 준비하세요!** _____ 45
- 8. 10. ~ 12.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2018 귀어·귀촌 박람회'개최 -

학교 밖 청소년 권리, 청소년 인권이 지켜지는 사회 만들어요

- “청소년이 있는 대한민국” 주제로 ‘제8차 열린소통포럼’ 개최 -

▶ 아르바이트 경험 청소년 5명 중 1명꼴(19.6%)로 임금체불 등의 부당한 처우*를 받았으며, 이 중 대다수 청소년이 피해에 소극적으로 대처하였음

*근로계약서 미작성 59.3%, 임금체불 13.4%, 임금미지급 15.4%, 성희롱·폭행 9.4% 등

< 출처: 청소년유해환경실태조사-여성가족부 >

▶ 학교 밖 청소년 2명 중 1명(55.5%)이 근로경험이 있으며, 21%는 취업 관련 진로를 준비 중, 학교 밖 청소년의 49.4%는 정규학교 복학, 검정고시 준비와 같은 학업 중심의 진로를 모색 중임

< 출처: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여성가족부 >

- 청소년의 노동인권과 학교 밖 청소년의 목소리를 정부와 국민이 함께 듣고 공감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열린소통포럼 공간에서 “청소년이 있는 대한민국, 청소년의 제안에 이제 정부가 답할 차례입니다”를 주제로 ‘제 8차 열린소통포럼’을 개최한다.
 -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은 국민과의 소통의지를 실현하는 소통의 장이자, 국민 참여 혁신의 정부 대표창구이다.
 - 이번 포럼은 ‘18년 3월 발표된 제 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3.6.)의 정책비전을 토대로 한 2017년 광화문1번가 열린포럼*에 이어, 청소년의 참여정책 방안을 이끌어 내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담은 자리로 마련되었다.

* [열린포럼] 청소년 : 청소년이 보이는 대한민국을 위하여(2017. 6. 1.)

□ 포럼은 2가지 제안발표와 주제별 토론, 정부의 현장 답변 등으로 이루어지며 정부부처, 전문가, 일반시민 등 40~50명 이상이 참석하여 학교 밖 청소년과 노동 인권 등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겪는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 첫 번째 발표에서는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전·현직 의원인 홍승민과 김주환이 “우리들의 노동인권조례 사용설명서”라는 제목으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제정 사례와 세부 정책을 소개하고, 노동인권 조례의 확장을 위한 청소년 참여방안을 제안한다.

* 「성남시 청소년 행복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14.11.10)에 근거하여 청소년의 의견을 대변하고 청소년 정책발굴 및 제안하는 기구 '15.07부터 운영)

○ 두 번째 발표에서는 광주꿈드림청소년단X세학자(세상이 학교인 자퇴생) 회원 김연영과 이소은이 “학교 밖에도 청소년 있어요”라는 주제로 재학생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관련 정책 수립을 제안한다.

□ 이어서 발표자·청소년·전문가·공무원이 발표 주제인 “청소년 노동인권”과 “학교 밖 청소년”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그 내용을 공유하는 주제 토론을 진행한다.

□ 주제 토론을 마친 후에는 청소년 제안 및 현장 토론에 대한 정부 입장과 ‘정책브리핑’이 진행될 예정이다.

○ ‘정책브리핑’에서는 송영광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서기관이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 중 포럼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발표하고,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 청소년 자립 및 보호 등 범정부 차원의 청소년 정책을 소개한다.

□ 이후 청소년 관련 단체와 전체 참가자가 청소년 제안과 정부 입장에 대하여 자유롭게 발언하는 ‘정책 토론’의 시간이 진행된다.

○ ‘정책 토론’에서는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이후에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실행 계획과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을 위한 실천 계획이 논의될 예정이다.

□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 조직실장은 “이번 열린소통포럼의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정책실현으로 이어져 청소년의 노동인권신장과 학교 밖 청소년의 꿈과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제8차 열린소통포럼’은 지난 일곱 차례 포럼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누리집과 페이스북에서 생중계되며, 토론내용은 누리집 ‘아카이브’ 메뉴를 통해 일반 국민과 정부 각 부처에 공유된다.

○ 또한 ‘열린소통포럼’의 취지가 상향식으로 정책을 공론화하여 국민의 뜻을 반영한 정책을 실현하는 것인 만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성으로 연결되도록 포럼 결과보고서를 해당 부처에 공문으로 송부하여 정책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열린소통포럼 누리집(www.gwanghwamoon1st.go.kr)에서 사전참관 신청이 가능하며, 당일 현장 방문하여 참관도 가능하다.

○ 직접 참석이 어려운 경우,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 첫 페이지의 ‘제8차 열린소통포럼’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참 고

「제8차 열린소통포럼」 세부 일정

시간	내용	비고
14:00~14:05 (5')	진행자 여는 말	
14:05~14:25 (20')	제안발표1: 우리들의 노동인권조례 사용설명서 * 홍승민, 김주환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14:25~14:45 (20')	제안발표2: 학교 밖에도 청소년 있어요 * 김연영, 이소은 (광주꿈드림청소년단X세학자)	
14:45~15:45 (60')	주제별 토론 * 발표자+청소년+전문가+공무원	
15:45~15:55 (10')	토론 공유	
15:55~16:00 (5')	휴식시간	진행: 박운정 더 이음 운영위원
16:00~16:15 (50')	피드백 & 브리핑 - 청소년 제안 및 현장 토론에 대한 정부 피드백 - 청소년을 위한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브리핑	
16:15~16:45 (30')	정책토론 - 정부 피드백과 정책 브리핑을 듣고 참가자 전체 토론	
16:45~16:55 (10')	회고 - 청소년을 비롯한 포럼 참가자(교사, 활동가, 연구자 등) 자유발언	
16:55~17:00 (5')	진행자 닫는 말	

장애인거주시설 등 복지시설의 의료서비스 제공 투명해진다

- 국민권익위, '촉탁의사 근무시간 기준, 표준협약서, 지도·점검 규정'

마련토록 보건복지부에 권고 -

- 장애인거주시설(전국 1,505개)의 촉탁의사 근무시간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인건비가 과다하게 지급되거나, 장애인거주시설, 노숙인시설, 정신요양시설 등 각 시설과 촉탁의사 간 표준협약서가 없어 촉탁의사의 업무범위가 불명확했던 문제점들이 개선된다.

※ 촉탁의사는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혹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각 시설에서 입소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정·운영하는 계약에 의한 의료인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복지시설 촉탁의사 운영상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거주시설 등의 촉탁의사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 정부는 장애인거주시설 등의 입소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촉탁의사를 지정·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거주시설 촉탁의사의 경우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 '월 2회 이상 시설 방문' 규정만 있고 근무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다.

실제 촉탁의사가 시설에 월 1~2회 방문해 총 1~3시간만 근무하고 월정액 인건비(253만원) 전액을 받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었다.

- A시설의 촉탁의사는 월2회 방문, 60분 근무하고, 인건비(보조금) 253만원 수령
 - B시설의 촉탁의사는 월2회 방문, 160분 근무하고, 인건비(보조금) 253만원 수령
 - C시설의 촉탁의사는 해당시설에서 근무하지 않거나, 월1회 1시간 내외로 근무하고 연간 8,300만원의 인건비(보조금) 수령
 - D시설의 촉탁의사는 월1회 방문 1시간 내외 근무하고 인건비(보조금) 253만원 수령
- (‘17. 3. 권익위 실태조사)

일부 장애인거주시설, 노숙인시설 및 정신요양시설에서 촉탁의사와 업무협약 시 표준협약서(계약서)가 없어 임의로 작성해 사용했다.

협약서가 있는 경우에도 근무기간, 근무시간 및 업무범위 등 주요 내용이 빠져있거나 계약기간이 1~2년, 자동연장 등 제각각이었다.

- A시설, B시설은 촉탁의사 업무협약서에 근무시간(출퇴근기록 미비 등), 진료기록부 작성 등 업무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진료기록부 미 작성 등으로 인해 시설입소자에 대한 지속적인 건강상태 관리 미흡
 - 동일분야의 시설인 경우에도 지역마다 계약기간이 1년, 2년, 수년 동안 자동연장. 근무형태도 월 1회, 월 2회, 주 1회 등 제각각임
- (‘18. 5. 권익위 실태조사)

또 각 시설 현장에서 규정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촉탁의사 업무에 대한 구체적 지도·점검 규정이 없어 대부분의 지자체는 촉탁의사의 업무 수행에 대한 적절한 지도·점검을 하지 않고 있었다.

-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촉탁의사 근무에 대해 모르거나, 시설 지도·점검 시 촉탁의사 근무기록(간호사가 대신 기록) 부실, 실제 근무시간과 업무 등에 대한 파악 미비

(‘18. 5. 권익위 실태조사)

- 이에 국민권익위는 장애인거주시설 촉탁의사에게 지급하는 월정액 급여를 고려해 구체적인 근무시간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및 노숙인시설과 촉탁의사 간 업무협약에 관한 표준서식을 마련하고 협약기간·근무시간·업무범위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촉탁의사의 근무상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점검 규정을 마련해 지자체가 촉탁의사의 근무상황에 대해 실질적인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숙인시설 등 복지시설 촉탁의사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했던 인건비 과다지급, 근무상황에 대한 지도·점검 미흡 등을 개선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과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공재원이 투입되는 각 분야의 부패유발 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

붙임

장애인·정신장애인·노숙인·노인의료복지시설 촉탁의사 관련 비교

구분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숙인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
관련규정	「2018장애인복지 시설사업안내」	「2018정신건강 사업안내」	「2018년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2018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협약의료기관 및 촉탁의사 운영규정)」
촉탁의사 근무시간	월2회 이상 근무시간 없음	주1회 이상 (1회 8시간 이상)	월4회 (1일 8시간)	월2회 이상 진료 (1회 50명 이내 진료 가능)
월인건비	2,536,000원 (국가보조금)	2,440,000원 (국가보조금)	2,372,400원 (국가보조금)	1회 50명 이내 진료비용 (국민건강보험)
입소대상	장애인	정신장애인	노숙인	장기요양 등급 노인
시설 수 (입소자 수) (촉탁의 수)	1,505개 (약30,980명) (347명)	59개 (약11,072명) (58명)	77개 (약7,265명) (17명)	3,286개 (약131,064명) (2853명)

홍종학 장관, 최저임금 애로 겪는 외식업 소상공인들과 간담회

- 최저임금으로 어려워하는 외식업 소상공인의 현장목소리 청취 -

- 2019년 최저임금이 확정 고시('18.8.3.)됨에 따라, 애로를 호소하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완화 대책 마련을 위한 중소기업부의 현장행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 중소기업부 홍종학 장관은 8월 9일 한국외식업중앙회를 찾아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였다.

「외식업 소상공인 현장소통 간담회」 행사개요

- 일시·장소 : '18.8.9(목). 14:00~15:30, 한국외식업중앙회 중앙교육원
- 참석자 : (정부) 중기부 홍종학 장관, 소상공인정책관, 고용부 국장 등
(업계) 한국외식업중앙회 제갈창균 회장, 지회장 등 24명
- 주요내용 : 최저임금 애로·건의사항 등 현장의견·해소방안 논의

- 홍 장관은 간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전적으로 서민경제에 가중시키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고,
 - “통상적인 최저임금 인상분 이상의 정부지원을 통한 보전으로, 추가적인 부담을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 외식업계는 지난 10년간 매출액은 2배, 사업체와 종사자수는 지속 성장중이지만, 과도한 시장진입으로 폐업률은 타 산업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 * 매출액 : ('06) 50조 8,923억원 → ('16) 118조 8,290원(112.2%↑)
- * 사업체수 : ('06) 54만 6,504개소 → ('16) 67만 5,199개소(20.2%↑)
- * 종사자수 : ('06) 145만명 → ('16) 199만명(33.8%↑)
- * '15년 폐업률(폐업자/신규사업자) : (음식점업) 21.9% vs (전산업) 11.8%

- 사업체 86.5%가 5인 미만 소상공인들로, 매출액도 1억원 미만이 61.0%로 영세하고, 10시간 이상 장시간 근무를 요구하는 특성상 최저임금 인상으로 애로를 겪는 대표적인 업종이다.

□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외식업계의 건의사항과 애로사항 및 부담완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 되었으며,

- 대기업의 불공정 관행, 높은 카드수수료와 상가임대료 등 서민경제의 취약한 수익구조를 바로잡아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낮추는 정부대책의 방향도 소개되었다.

□ 홍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일안자금 지원대상 확대 등을 내각에 건의하여 관철시키는 등 현장애로에 적극대응 중”이며,

- “앞으로 업종별, 지역별 경청투어 확대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해소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1. 목적

- '19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는 외식업 사업주들의 애로사항 청취 및 해소방안 논의

2. 행사 개요

- 일 시 : '18. 8. 9.(목) 14:00 ~ 15:30(90분)
- 장 소 : 한국외식업중앙회 중앙교육원
 - * 위치 : 서울시 중구 퇴계로 166 흥국빌딩 3층
- 참석자 : 30명
 - (업 계)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단 및 지회장 24명
 - (중기부) 장관, 소상공인정책관, 소상공인지원과장 등
 - (관계부처) 고용노동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 (유관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이사장 등

3. 주요일정

- 외식업계 애로사항 청취 및 해소방안 논의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05	(05')	내빈소개	중앙회 사무총장
14:05~14:08	(03')	인사말씀	중앙회장
14:08~14:13	(05')	간담회 모두말씀	장관
14:13~15:27	(74')	현장의견/애로사항 청취·논의	참석자
15:27~15:30	(03')	마무리 말씀	장관

※ 간담회는 모두발언까지 공개 후, 비공개로 진행

직업계고 현장실습 지도·점검 강화한다

- 공인노무사, 산업안전 전문가 동행
원스톱 상담신고, 전문적 법률지원을 통한 피해학생 권리구제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직업계고(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 직업계열) 현장실습 산업체에 대한 강화된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 산업체 현장실습이 학생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학습중심 현장실습으로 운영되도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마련된 이번 계획은,
 - 학교와 교육청의 현장실습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노동인권 및 산업안전 전문가와 함께 산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현장실습생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 교육부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현장실습 중앙 점검단을 구성하여 17개 시·도교육청의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교육청의 현장 점검을 지원한다.
 - 현장실습 중앙 점검단은 올해 11월~12월에 걸쳐 교육청별 취업지원 센터를 통하여 현장실습 운영 전반을 살펴보고 일부 학교와 사업장을 선정·방문하여 점검한다.
 - 교육부는 학교의 현장실습 산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의 전문성을 높이고 시·도교육청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6월 한국공인노무사회를 현장실습 지도·점검 지원 기관으로 선정하였다.
 -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산업체를 점검하고 피해

학생 권리구제, 현장실습 지도·점검 매뉴얼 개발 및 교사 연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 다만, 현장실습 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참여 기업에 대한 고발 등 규제 중심이 아닌 현장실습 운영 전반에 대하여 기업이 자율 점검을 이행하도록 컨설팅하고 지원하게 된다.

- 산업체 현장실습 지도·점검에 대한 결과는 현장실습 관리시스템(hifive.go.kr)에 탑재하여 중앙에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 현장실습 관리시스템에 현장실습상담지원코너(가칭)를 개설하여 온라인·모바일로 상시상담과 피해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 ※ 상담전화 개설 및 온라인·모바일 기능을 구현하여 휴대전화로 상시 접속

- 전문적 법률 지원, 권리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와 연계하여 통합 지원을 실시한다.

- ※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운영 중인 청소년근로권익센터(youthlabor.co.kr, 1644-3119, 카톡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통해 상담 및 법률 지원, 권리 구제까지 통합 지원

□ 시·도교육청은 자체 계획에 따라 현장실습 점검단을 구성하여 산업체와 학교의 현장실습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

- 특히, 시·도교육청에서는 산업체 현장실습 실태점검 담당 교사가 총 300여 명의 권역별 공인노무사와 함께 약 3,000개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점검하고 현장실습생과 상담을 진행한다.

- 실태 점검은 전체 현장실습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해당 학교 교사와 외부 전문가(공인노무사, 시·도 컨설팅단 등)*를 포함, 2~3인 이상으로 점검단을 구성한다.

* 취업지원센터, 현장실습 시·도지원단*(중앙컨설턴트 포함), 산업안전협회,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지원센터 등 현장실습 및 산업안전·노동관계법

전문가 등(예시: 경기도 외부 전문가 60명 중 공인노무사20명 위촉)

- 현장실습 점검단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준수, 학생 안전교육, 현장실습 계획(프로그램) 이행, 학생 적응 지원 등을 점검한다.
- 점검 결과 경미한 사안은 개선 권고 등 현장 조치하지만 의도적인 불법과 권고 미이행 및 협약 미준수의 경우, 현장실습 중단 등 최우선으로 학생을 보호한 다음 교육청과 지방고용노동관서가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며,
-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의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현장실습표준협약서의 주요 내용을 지키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 표준협약서 6대 중요사항별 과태료 부과권자 : ▲(교육부장관) ① 현장실습 기간, ② 현장실습 방법, ③ 담당자 배치, ⑥ 현장실습 내용의 변경 절차, ▲(고용노동부장관) ④ 현장실습 수당, ⑤ 안전·보건상의 조치

- 김영곤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 “올해부터 학습중심 현장실습 제도 개선에 따라 실태점검을 강화하게 되는데, 학생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현장의 여건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 “특히 학교와 산업체가 협력하여 근로가 아닌 학습과 연계된 실무 중심 현장실습을 내실있게 진행하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중소기업 청년 과학기술인들 사기진작을 위한 간담회 개최

- 판교 [주]원스 기업부설연구소에 방문하여 현장 의견 수렴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인공제회(이사장 조율래, 이하 '공제회')와 함께 중소·중견기업 청년 과학기술인 사기진작을 위한 의견 수렴을 위해 7월 30일(월) 판교에 위치한 (주)원스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청년 과학기술인들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그간 정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설 등 중소·중견기업 청년 근로자 재정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금·복지 혜택이 열악한 중소·중견기업의 청년 과학기술인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은 상황이다.

* (신설) 청년 600 + 기업 600(고용보험 지원) + 정부 1,800 = **3년 3,000만원 (청년내일채움공제)**

□ 간담회에서 청년 과학기술인들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복지와 긴 노동시간, 그리고 전문성을 키우기 어려운 환경 등에 대해 의견을 피력했다.

□ 이에 서성일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정책과장은 “오늘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기술혁신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과학기술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 고민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관광 분야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을 위한 간담회 개최

- 8. 1. 유원시설업계, 8. 3. 여행업계, 8. 9. 호텔업계 간담회 이어져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 나종민 제1차관은 8월 1일(수) 오후 3시, 종합유원시설업인 ‘롯데월드 어드벤처’를 방문해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을 위한 유원시설업계와의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노동시간이 주 52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노동집약적 산업인 관광업계의 대응 현황과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한편, 노동시간 단축 도입에 따라 늘어난 여가시간*을 관광 수요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17년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 하고 싶은 여가활동 1위 관광(71.5%)

*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인식조사('18년 6월, 리얼미터) 결과 51.7% 국민이 노동시간 단축 바람직한 것으로 응답

유원시설업은 날씨와 미세먼지, 외국인 관광객 등 외부환경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으로서, 중국인 관광객 감소에 따른 매출액 감소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특히 타 분야에 비해 성수기, 비수기가 명확하게 나뉘는 업종으로서 주 단위, 월 단위와 같이 일괄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유원시설업계 관계자도 “현행 3개월인 탄력적 시간 근무제를 최대 1년까지 연장해, 성수기·비수기에 따라 노동시간을 상황에 맞추어 적용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최우선 과제로 건의했다.

한편 나종민 제1차관은 간담회 시작에 앞서 롯데월드 내 ‘가상현실(VR) 스페이스’를 시찰하며, 전통적 놀이기구에서 한 단계 나아간 가상현실(VR) 놀이기구 등 신기술을 적용한 콘텐츠가 유원시설업계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롯데월드 어드벤처 박동기 대표는 “롯데월드에서는 신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내부 연구실을 설치했고, 이미 테마파크형 가상현실 놀이기구(테마파크 시네마틱 VR 어트랙션)를 국제 테마파크 박람회인 ‘2018 세계 테마파크협회(IAAPA) 홍콩’에서 선보여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라며, “내년 상반기에 개장할 예정인 가상현실 놀이기구 외에도 다양한 미디어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를 순차적으로 선보이겠다.”라고 밝혔다.

나종민 제1차관은 “노동시간 단축이 단기적으로는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여가시간이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관광객들의 수요가 늘어나 가상현실·증강현실을 적용한 놀이기구 개발, 새로운 관광콘텐츠 발굴, 관람객 체험형 시설 확대 등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 기회를 활용해 업계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길 당부했다.

유원시설업계와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여행업계, 숙박업계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 간담회도 순차적으로 이어진다.

나종민 제1차관은 8월 3일(금) 오후 2시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모두투어 네트워크, 롯데관광개발 등 여행업계의 관계자가 모인 가운데 노동시간 단축 애로사항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여행업계에서는 시차 출퇴근제, 탄력적 시간근무제, 사전 휴일제, 집중 근로제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해 노동시간 단축에 대응하고 있으나, 해외출장에 대한 근로시간 산정기준 마련, 성수기·비수기를 고려한 탄력근무제 확대(1년 단위) 등을 현안으로 꼽고 있다.

8월 9일(목) 오후 3시 한국호텔업협회에서는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관 주재로 호텔업계 노동시간 단축 간담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관광숙박업계는 그동안 특례업종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300인 이상 사업체라도 올해 7월부터 52시간 노동시간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 숙박업 등 특례 제외 업종 중 300인 이상 사업체는 '19년 7월 적용 예정, 300인 미만 사업체는 특례 제외 여부 상관없이 다른 업종과 동일하게 적용

하지만 문체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규모가 큰 사업체를 중심으로 노동시간 단축방안을 선도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실제 현장에서 도입을 준비하며 겪고 있는 제도상 어려움 등을 청취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관광 분야 노동시간 단축 현장 간담회를 통해 관광 분야 특화 지원정책을 발굴하는 등 업계 현안을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 아울러 노동시간 단축이 직장인들에게 여가를 제공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농정 역량강화 교육을 정책집행 파트너까지 확대!!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유관기관 관리자 역량강화 과정’ 운영 -

《 주 요 내 용 》

◆ 농정의 효과적 추진과 소통강화를 위해 ‘유관기관 관리자 역량 강화’ 과정 개발 및 운영(‘18. 2회)

○ 일자·장소 : ‘18. 8. 6~8. 10. 농식품공무원 교육원

○ 교육대상 : 유관기관* 관리자

*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등

□ 농식품공무원교육원(원장 서해동, 이하 교육원)은 농업정책의 효과적 추진과 상생발전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파트너이자 국정 및 정책수행 공공기관 관리자까지 역량개발교육을 확대하고자 ‘유관기관 관리자 역량강화’ 과정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 ‘유관기관 관리자 역량강화’ 과정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50여회 공직자리더십역량강화과정을 운영해 온 교육원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설계되었다.

○ 이 교육과정은 2018년도 총 2회(8월, 11월)를 운영할 예정이며, 제1회 교육과정은 8월 6일부터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관리자 23명을 대상으로 5일 동안 진행된다.

□ 이번 교육과정은

- 농식품 유관기관 관리자로서 필요한 소양교육과 직무교육과정으로 구성하였다. 직무교육과정은 관리자에게 필요한 업무역량과 관계역량을 향상시키고자 이론교육과 서류합기법, 역할연기, 집단토론, 구두발표 방법을 활용한 실습교육으로 편성하였다.
- 매일 아침 교육에 대한 동기부여를 제공하고자 ‘아침을 여는 시간’을 마련하였으며,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자 ‘10분 충전’이라는 프로그램도 마련하였다.
- 이번 교육은 역량사전진단과 사후진단을 통해 변화하는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고, 실습시간마다 역량 전문강사(퍼실리테이터)와 동료의 평가와 피드백을 받음으로써 부족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 교육이 끝난 후에 리더십 안내자료를 지속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며, 부족한 역량을 보완할 수 있는 관련 서적을 안내하고 제공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교육의 내실화를 기할 예정이다.
- 서해동 교육원 원장은 ‘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현장정책 집행자인 농림축산식품 유관기관 관리자 역량이 향상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 앞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관련한 기관 및 단체와 상생하고, 농업인을 위한 농업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유관기관 관리자 역량교육과정을 지속가능한 과정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추진배경

- 관리자 직급으로 올라갈수록 표면적 지식·기술보다는 변화관리·전략적사고·조정통합·성과관리·고객지향 등 해당직급의 역할수행에 필요한 리더십 역량이 직무성과에 큰 영향을 미침
- 농식품부 유관기관 관리자에게 역량개발교육을 시킴으로써 본인에게 부족한 역량을 파악하고 개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교육목적

- 농식품 유관기관 관리자로서 역할수행에 필요한 리더십역량개발

□ 교육개요

- 일시: (1기) '18. 8. 6. ~ 8. 10. / (2기) '18. 11. 26. ~ 11. 30.
- 장소: 농식품공무원교육원(나주)
- 교육대상: 유관기관 관리자*
 - *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등

□ 교육운영 및 내용

- 역량별 이론학습(6가지 역량)
 - 업무역량: 정책기획, 성과관리, 조직관리
 - 관계역량: 의사소통, 이해관계조정, 동기부여
 - * 관리자급인 농식품부 과장후보자 역량으로 준하여 교육실시 후 자신의 기관과 차이점 찾아가는 시간 마련
- 역량개발을 위한 역량평가기법을 활용한 모의실습 및 피드백
 - 구두발표, 1:1역할수행, 집단토론, 서류합기법

- 자기개발계획수립 : 사전 사후 역량진단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인식하고 발전계획 수립
- 교육동기화 및 활성화를 위한 방안
 - ‘아침을 여는 시간’(8.7~8.10. AM9:00~9:15)
 - 10분 충전 : 교육시간 중간에 교육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마련
 - * 스트레칭, 음악감상, 게임 등
- 사후관리 : 교육 후 웰컴레터 32회 발송. 역량사후진단결과를 반영하여 필요역량 개발서 발송

안전하고 차별없는 환경미화원 노동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방안 마련 -

□ 이낙연 국무총리는 8월 8일(수)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하였습니다.

○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방안」, 「가습기 살균제 대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과 「7전8기 재도전생태계 구축방안」을 심의·확정했습니다.

* 참석 : 국무총리(주재), 과기정통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국토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권익위원장, 공정위원장, 기재부1·교육부·고용부 차관, 금융위 사무처장, BH 정무비서관 등

◆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방안 (관계부처 합동)

□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발생한 환경미화원 사망사고('17.11~'18.2)에 따라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복리후생을 증진시키는 노동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17.11.16) 광주 남구, 수거작업을 하다 잠시 내린 사이 후진한 차량에 치여 사망
('17.11.29) 광주 서구, 매립장에서 청소차 적재함 덮개에 머리를 다쳐 사망
('18. 2.23) 서울 용산구, 청소차 컨테이너 교체 작업 중 유압장비에 끼여 사망

□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근로자 중심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주간근무 원칙을 확대('18년 38% → '19년 50%)하고, 폭염·강추위와 같이

기상이 악화되는 경우에 적용할 작업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왕시의 경우 '11년 주간근무로 전환한 이후 사고율 43% 감소

- 또한, 청소차량별 필수인원 기준을 설정하는 등 과중한 작업량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고,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와 같은 건강관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절단방지장갑, 차량 후방카메라, 적재함 덮개 안전장치 등 실효성 있는 안전장비도 갖추어나가겠습니다.

② 고용형태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미화원 대부분(56.2%)이 위탁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직영-위탁 근로자 간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탁 근로자의 임금, 복리후생비 등을 현실화 해 나가겠습니다.
- 위탁업체가 계약사항을 준수하도록 지자체의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위탁계약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따르도록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을 개정하겠습니다.
- 또한, '근무환경 개선 협의체*'를 구성하여 환경미화원 근무환경을 점진하고 고용안정 확보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행안부·환경부·고용부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 환경미화원, 위탁업체, 전문가 참여

③ 청소행정에 대한 예산을 확대하고 환경미화원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 환복만 가능한 열악한 휴게시설을 세면·세탁 등 근로자 휴식이 가능한 쾌적한 휴게시설로 개선하고,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조정을 통해 지자체 예산확대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지자체와 지역주민, 환경미화원 간 적극적인 소통방안*을

마련해 갈등 예방에도 힘쓰겠습니다.

* (의왕시 우수사례) 간담회 개최, 무기명 건의함 운영, 단체 대화방을 통한 정보공유

- 이번에 마련된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 추진과제(11개)는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갈 예정이며,
- 중앙-지방간 협력체계(근무환경 개선 협의체)을 중심으로 이행상황도 지속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1.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방안 실행계획

붙임 1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방안 실행계획

추진시기	주요 추진 과제	실행방안
【1단계】 우선 즉시	① 환경미화원작업안전 지침 마련	▶ 지자체·위탁업체·근로자 준수사항을 지침으로 마련·보급
	② 지자체 산업안전보건위 설치,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실시	▶ 개선방안 공문 시달 후, 교육(고용부) 등 지자체 이행 지원
	③ 지자체의 위탁업체 관리·감독 강화	▶ 개선방안 공문 시달 후 지자체 이행상황 점검 및 컨설팅 지원
	④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선	▶ '19년 예산편성방향에 환경미화원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재정투자 강화 내용 반영
【2단계】 12월까지	① 지자체 특별재정 지원	▶ 시·군·구 수요조사 후 휴게시설 개선 특별재정 지원
	② 지자체 재정투자 확대 유도	▶ 보통교부세 배분액 산정기준 개선 (폐기물 관련 수요 가중치 상향 조정)
	③ 안전기준 설정 및 매뉴얼 개선	▶ 폐기물관리법 및 시행규칙 개정 ▶ 작업안전수칙 매뉴얼 개선 후 지자체·위탁업체 보급
	④ 기상상황별 작업기준 마련	▶ 환경미화원을 위한 기상상황별 작업 중지 등 가이드라인 마련 ※ 지자체, 위탁업체 보급
【3단계】 내년까지	① 표준인력모델 마련 및 임금체계 개선	▶ 구·신도심, 농어촌 등 유형별 표준인력 모델 마련·보급 ▶ 임금은 근무환경 개선 협의체를 통해 개선안 마련
	② 주간근무 원칙 확대 적용	▶ 개선방안 공문 시달 후, 지자체 추진상황 점검 및 컨설팅 지원 ※ 주간근무 전환 수범사례 등 전달·공유
	③ 고용형태 개선방안 등 검토	▶ 하반기 정책방향 발표(고용부) 후 근무환경 개선 협의체를 통해 추진방안 논의

⇒ 중앙-지방 협력체계 구축(근무환경 개선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관계부처·지자체 추진과제 이행여부 점검·관리(~'19.4월)

고용노동부,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 마련

- 청소·경비용역 사업장과 백화점·면세점 등 취약사업장 중심으로
9월부터 실태점검 실시기로 -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화장실을 휴게시설로 사용하는 등 휴게 공간이 없거나 부족하여 제대로 쉴 수 없는 노동자들을 위해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를 마련하고 산업현장에 배포한다.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의 의무), 동법 제29조 ⑨항(도급사업시의 안전보건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휴게시설), 동 규칙 제567조(휴게시설의 설치)등에 의해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신체적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간 백화점·면세점 판매노동자와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열악한 휴게시설 문제가 제기되어, 사업장에서 휴게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리모델링할 때 참고할 설치·운영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이번 휴게시설가이드를 만들었다.

*휴게시설 설치자금에 대하여는 안전공단을 통해 산업재해예방시설융자·보조 등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융자금 및 보조금의 최대 한도액은 10억원임(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

※ 고용노동부는 휴게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기 위해 '17년에 '사업장 휴게시설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전문가 및 노사의견 수렴 과정을 거침

- 가이드에는 △설치·이용 원칙, △설치대상과 위치·규모, △휴게시설의 환경, △비품 및 관리 등이 포함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휴게시설의 면적은 1인당 1㎡, 최소 6㎡미터를 확보하고, 냉난방·환기 시설 등을 설치해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 옥외 작업장의 경우 여름철에는 폭염에 대비하기 위한 그늘막, 선풍기 등을, 겨울철에는 한파에 대비한 온풍기 등 난방시설을 설치한다.
-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제시된 조명과 소음기준을 준수하고, 등받이 의자와 탁자, 식수나 화장지 등 필요한 비품 등을 구비한다.
- 휴게시설은 작업장이 있는 건물 안에 설치하며, 불가피할 경우 작업장에서 100미터 이내나 걸어서 3~5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곳에 마련한다.

□ 고용노동부는 휴게시설가이드가 현장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유관단체, 사업장 등에 배포하는 한편,

- 근로감독관 및 민간 재해예방전문기관을 통해 사업장 휴게시설의 설치·운영실태를 자체점검토록 지도하고, 고용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자료를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 고용부(<http://www.moel.go.kr>), 안전보건공단(<http://www.kosha.or.kr>)

- 특히, 9월부터는 청소·경비용역 사업장과 백화점·면세점 등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휴게시설 설치·운영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하여 노동자의 피로와 스트레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집중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휴게시설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동조건”이라고 강조하면서 “노동자가 휴게시설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방과후아카데미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재로 성장합니다!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창의융합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청소년 인재 양성을 강화하기 위해 8월 6일(월)부터 3개월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10개소에서 '창의융합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기관 가운데 우수한 평가를 받고, 과학기술·인문·예술 등의 영역을 통합한 프로그램 운영 능력을 갖춘 10개 기관을 지난 7월 '창의융합역량강화사업 선도 기관'으로 선정했다.
-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초4~중3)에게 청소년수련 시설 등 청소년활동 전문시설을 활용하여 균형적인 역량 개발 및 건강한 성장을 종합 지원하는 기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창의융합역량강화 선도기관 10개소】

- | | |
|--|-------------------------|
| - 경기도 : 군포시청소년수련관, 안양만안
청소년수련관, 이천창전청소년
문화의집,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 - 울산광역시 : 울산동구청소년문화의집 |
| - 대구광역시 : 대구광역시청소년문화의집 | -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청소년수련관 |
| - 서울특별시 : 보라매청소년수련관 | - 제주특별자치도 : 이도1동청소년문화의집 |
| | - 충청남도 : 천안시태조산청소년수련관 |

- 선도 기관들의 창의융합 프로그램은 주로 지역사회문제 해결형 프로그램, 첨단 기술 발전과 연계한 활동 등으로 구성됐다.

- ‘경기도 군포시 청소년수련관’은 수련관 근처 곳곳에 분포되어 있는 도서관, 미니문고, 거리문고 등을 청소년들이 직접 탐사하고, 실사모형을 활용해 지도를 만들어 무선 데이터 통신기술(NFC)로 도서관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디오라마 책나라 로드맵’)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1동청소년문화의집’은 인공지능이 사용된 다양한 실생활을 체험하고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토론한 뒤, 4차 산업혁명시대의 진로를 설계·발표하는 과정을 진행한다. (‘미래 인공지능 공감 학습’)

□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2006년부터 운영하며,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상담 등 종합 서비스를 지원해 왔다. 앞으로 ‘창의융합역량강화사업’을 계기로 기존의 지도자 중심, 일방향적 학습·체험활동에서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창의성을 발휘하는 방과 후 활동으로 전환해 나갈 예정이다.

- 이를 위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도자를 대상으로 지난 3~6월 창의 융합 프로그램 기획 기법 관련 오프라인 기초 교육을 실시했으며, 지난 7월 선도기관 대상 심화교육도 운영한 바 있다.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참여를 원할 경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홈페이지(<http://www.youth.go.kr/yaca/index.do>)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을 찾아 연락처와 프로그램 등을 확인하고, 수시로 신청 문의 및 상담을 요청하면 된다.

□ 이기순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미래시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실행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창의융합역량강화 사업’은 학교 교과과정 내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양질의 다양한 활동 기회를 청소년들에게 제공하며, 앞으로 운영기관 및 프로그램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개요

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창의융합역량강화사업 개요

□ 사업개요

- (목적)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상담 등 종합서비스를 통해 건강한 성장 및 자립 역량 배양
- (근거) 청소년 기본법 제48조의2(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
 - * 추진 경과 : '05년 시범사업(46개소), '06년 전국규모 운영(100개소), '08년 농산어촌 활성화 연계(180개소), '11년 청소년기본법에 추진근거 마련, '16년 중3까지 지원대상 확대

《 연도별 지원 현황 》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운영개소수	46	100	151	185	178	161	200	200	200	200	244	250	250
참여인원	2,350	4,200	6,300	7,980	7,560	6,672	8,200	8,060	8,200	8,091	9,490	9,745	9,773

□ 주요 현황

- (지원대상)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초4~중3)
 - * 지원기준 : 저소득층, 한부모, 조손, 다문화, 장애, 3자녀 이상 가정 등
- (사업규모) 전국 260개소
- (지원유형) 기본지원형, 농산어촌형, 장애형, 다문화형
- (프로그램) 지역여건 및 학부모의 수요를 고려한 체험활동, 기초학습, 급식, 상담, 부모교육 및 캠프 등 운영
 - * 운영시간 : 방과후 ~ 21:00(일일 4시간 이상 연중 운영)

《 방과후아카데미 지원 서비스 》

구 분	내 용	
전문체험활동과정	예술체험활동, 과학체험활동, 직업개발활동, 봉사활동, 리더십개발활동 등 강습 형태가 아닌 체험활동 위주로 청소년들의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기초학습과정	보충학습지원	청소년들의 자율적인 숙제, 보충학습지도, 독서지도 등의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
	주요교과목지원	전문 강사진의 교과학습 중심의 학습지원
자기개발활동과정	청소년들이 중심되는 활동(자치활동, 동아리활동 등), 체험활동의 성격으로 담당 실무자 운영(지역사회 연계하여 활동 위주의 프로그램 운영도 가능)하는 등 체험활동 중심운영	
특별지원과정	청소년캠프, 부모교육, 발표회 등 특별프로그램 지원	
생활지원	급식, 상담, 건강관리, 생활일정 관리(메일링서비스) 등의 생활지원	

□ 추진 배경

- 창의융합인재교육(STEAM, MAKER)* 방식을 접목한 방과후 활동 확대를 통하여 복합적 문제해결력 및 협력·공유 역량을 겸비한 미래 인재 양성
 - * STEA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s, Mathematics)은 과학, 기술, 공학, 인문·예술, 수학 등 교과간의 통합적 교육으로 실생활의 문제해결력을 배양하는 교육
 - * MAKER 교육은 디지털 기기와 다양한 도구를 사용한 창의적인 만들기 활동을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만든 결과물과 지식, 경험을 공유하는 교육
- 창의융합인재 양성 선도 방과후아카데미를 선정, 맞춤형 컨설팅 지원 및 시범운영 실시를 통한 창의융합역량 강화 모델 도출

□ 추진방안

- (기관선정) 평가 우수 기관 및 창의융합활동 인프라가 갖춰진 기관 중 선정
- (기관·지도자지원) 선도기관 대상 창의융합 심화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심화교육 지원) 기관별 프로그램 계획 발표 및 전문가 피드백 형식의 교육 제공
 - (시범운영지원) 선도기관으로 선정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창의융합 프로그램을 편성·운영 할 수 있도록 기관별 강사·재료비 추가 지원
 - (컨설팅지원) 시범 운영 과정에서 전문 멘토와 기관 간 1:1 매칭 통한 기관별 맞춤형 온·오프라인 컨설팅 지원 동시 진행
- * 프로그램 운영계획서 구성, 실제 수업 운영 상황 등에 대한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안 도출 지원

□ 향후 추진 계획

- (결과간담회) 시범운영 결과 간담회를 통한 개선 필요 사항 도출(12월)
- (사례집제작) 선도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운영사례를 종합한 사례집 제작·배포(12월)
- (멘토링활동) 10개 선도기관 지도자들을 ‘창의융합역량강화 리더그룹’으로 구성하여 지도자 교육 및 컨설팅 등에 멘토로 활용(‘19년~)

저소득 가구 부양가족 있어도 10월부터 주거급여 받는다

- 중위소득 43% 이하 가구 대상 8월 13일부터 사전 신청...10월부터 지급 -

<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사례 >

- * (사례1) 장애인 A씨는 부양의무자인 아들의 월급 인상으로 수급자에서 탈락했으나, 아들은 사업 실패에 따른 채무 상환 중으로 실제 A씨에 대한 부양이 곤란한 상황이다.
- * (사례2) 유치원에 다니는 딸을 둔 B씨는 이혼 후 급여 신청을 위해 딸의 부양의무자인 전 남편의 금융 정보 제공동의서가 필요하나, 전 남편과는 연락이 닿지 않아 현실적으로 동의서를 받기 곤란한 상황이다.

□ A씨나 B씨와 같이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 수급 신청이 불가능했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도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올해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이는 부양능력이 있어도 사실상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가구 등 주거 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위한 조치다.

*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수급권자로 인정

□ 사전 신청 기간은 8월 13일(월)부터 9월 28일(금)까지로,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던 가구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 신청을 접수한다.

- 사전 신청 기간 내에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오는 10월 20일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 사전 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10월 중 신청할 경우에도 선정절차 후 10월분 급여까지 소급하여 지급
- 한편, 8. 13. ~ 9. 30. 사전신청 기간 내 신청한 신규 수급자들도 동일하게 10월분 급여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 (지급 대상 기준)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4인 기준 194만 원)이하 가구

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선정 기준 (원/월)	719,005	1,224,252	1,583,755	1,943,257	2,302,759	2,662,262

* 마이홈 누리집(myhome.go.kr) “주거복지서비스-주거복지안내-자가진단” 활용하여 주거급여 수급여부 확인 가능

□ 국토부 관계자는 “모든 신규 수급자들이 차질 없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라며,

- “그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 수급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은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 아울러, “신청 예정자 수가 50만 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만큼 특정 기간에 신청이 집중되어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한 분산 접수 일정을 참고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사전 신청 권장기간 >

신청기간	1주차 8.13~17	2주차 8.20~24	3주차 8.27~31	4주차 9.3~7	5주차 9.10~14	6주차 9.17~21	7주차 9.24~
가구원	3명 이상	2명	1명				기간내 미신청 가구
수급자 연령			40대 이하	50대	60대	70대 이상	

- * 가구원별, 연령별 분산 접수기간이 아니라도 사전신청 기간내 언제든지 접수가능
- * 일부 지자체의 경우 사정에 따라 분산접수 일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에 주민센터로 확인 필요

□ 한편, 국토부는 수급기준 완화에 따른 부정수급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① 임대료 상한 - 실제 납부하는 월세 등이 기준 임대료(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 및 가구원수별 차등 적용)를 5배 초과할 경우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후 본인 소득은 낮으나 부양의무자로부터 현금 지원 등의 사적 부양을 통해 높은 임차료를 내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 수급자가 지불하는 실제 임차료가 급지별 기준 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 최저지급액(1만 원*)을 지급한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

< 참고: '18년 기준임대료, ()안 숫자는 전년대비 인상액 >

구분	기준임대료 (단위: 만 원/월)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 인천)	3급지 (광역시, 세종)	4급지 (그 외)
1인	21.3 (+1.3)	18.7 (+0.9)	15.3 (+0.6)	14.0 (+0.4)
2인	24.5 (+1.4)	21.0 (+1.0)	16.6 (+0.8)	15.2 (+0.5)
3인	29.0 (+1.7)	25.4 (+1.2)	19.8 (+0.9)	18.4 (+0.6)
4인	33.5 (+2.0)	29.7 (+1.4)	23.1 (+1.1)	20.8 (+0.8)
5인	34.6 (+2.1)	30.8 (+1.4)	24.2 (+1.1)	21.8 (+0.8)
6인	40.3 (+2.5)	36.4 (+1.7)	27.6 (+1.4)	25.2 (+1.0)

② 신규 사용대차*는 급여 지급 불가, 기존 수급가구는 3년 유예

* 사용대차란, 현물, 노동 등 임차료 외 별도 대가(생활비 일부 보조, 육아·가사

노동, 기타 다른 종류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시, 기준 소득·재산 이상을 보유한 가구가 가족 구성원 간 사용대차 방식으로 급여를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 가능하므로 신규 사용대차는 인정하지 않는다.
- 다만, 가족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등 일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사용대차를 지속 인정*하여 주거불안이 없도록 할 계획이며,
 - 추가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계층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지속 발굴하여 구제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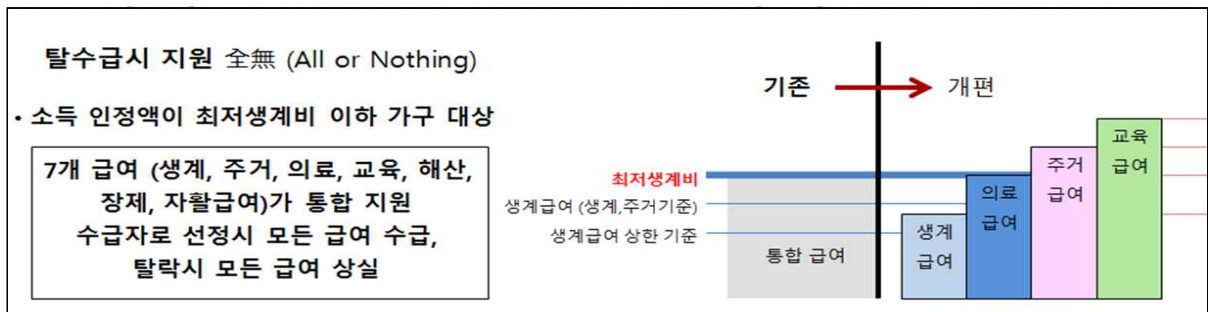
* (사례) 형제의 집에 중증장애인 동생 2인이 전입하는 경우 등

- 이외에도 소득·재산에 관한 조사는 연 2회, 주택조사는 연 1회, 부정수급 의심 가구는 수시로 확인할 뿐만 아니라,
 - 『주거급여 임차료 적정성 검증시스템』(‘18.7월 구축완료, LH)을 통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 붙임. 주거급여 사업 추진 개요 참고자료

□ **맞춤형 급여 개편**(‘15.7~)

- (급여개편 배경) 2000년 기초보장 급여체계 시행 이후 여러 차례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통합급여 방식에 대한 한계점이 지속 대두
 - 최저생계비 이하를 대상으로 각종 급여(생계·주거·의료 등 7종)를 포괄 지급하여 선정되면 ‘all’, 탈락하면 ‘nothing’으로 광범위한 사각지대 발생
 - 통합급여 내 주거급여는 거주형태, 임차료 수준과 무관하게 일괄 지급되어 빈곤가구의 실질적 주거비 부담 해소에 한계
- *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통합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소득증가시 수급 제외



< 개편전 주거급여 지급기준 >

- (수급자격)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조건을 충족하는 자 (구 「기초생활보장법」)
- (지원내용)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액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합한 금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지원
 - 임차가구, 자가가구 구별없이 단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전액 현금지원 → 주거급여 목적이 되기 보다는 최저생계비 명목

- (제도개선) 국정과제인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 방안으로 기초생활 보장제도상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맞춤형 개별급여*로 전환(‘15.7)
 - 실질적 주거지원을 위해 거주형태·임대료 부담수준 등을 종합 고려
- * 급여별 선정기준 다층화 : (생계) 중위소득의 30%, (의료) 40%, (주거) 43%, (교육) 50%
- * 주거급여법(‘14.1)을 통해 주거급여 운영주체,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 급여의 실시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일반법으로 준용

□ 주거급여 지원내용

- (수급자격)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18년, 4인가구 기준 194만원) 및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 '19년에는 중위소득 44% 이하로 지원대상을 확대(4인 가구 기준 203만원)

*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수급권자로 인정 → '18.10월 폐지

** '19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소득인정액(원)	751,084원	1,278,872	1,654,414	2,029,956	2,405,498	2,781,039

- (지원내용) 수급자격을 충족한 저소득가구에 대해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임차료 또는 주택수선 지원

- (임차가구) 지역별·가구원수별로 산정된 기준임대료(14~41만원)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에 따라 지급

* '22년까지 기준임대료를 최저주거수준 시장임차료까지 상향하는 것이 목표

- (자가가구) 구조안전, 설비 등 주택노후도에 따른 보수범위별 수선 비용(경보수 378만원, 중보수 702만원, 대보수 1,026만원)을 기준으로 지원

* 장애인은 단차제거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추가지원(380만원)하고, 고령자(만 65세 이상)는 편의시설을 수선비용 한도 내에서 지원

- (예산편성) '18년 총 11,252억원(임차·자가 1조930억/주택조사:257억 등)

* ('16) 1조9억원 → ('17) 9,238억원 → ('18) 1조929억원 → ('19) 1조6360억원

- (지원실적) '18.6월 현재, 임차가구 75.3만가구, 자가가구(총 7.1만가구) 중 1.6만가구의 주택수선 실시 중

기준연도	'15.6	'15.12	'16.12	'17.12	'18.6
수급자 수	68.6만	80.0만	80.4만	81.0만	82.4만
-임차가구		72.1만	72.7만	73.7만	75.3만
-자가가구		7.8만	7.7만	7.3만	7.1만

< 주거급여 수당 신청 안내 >

1.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 (지급 대상)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4인기준 194만원)이하 가구

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소득인정액(원/월)	719,005	1,224,252	1,583,755	1,943,257	2,302,759	2,662,262

※ 수급(권)자 명의의 자동차는 평가기준 가액을 소득인정액 월 100% 반영(단, 장애인사용자동차 제외)

※ 마이홈 홈페이지(myhome.go.kr) “주거복지서비스-주거복지안내-자가진단” 활용하여 주거급여 수급여부 판단

- (지급 기준) (임차)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소득·재산 많으면 일부 감액)

구분(원/월)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	4급지(그 외 지역)
1인	213,000	187,000	153,000	140,000
2인	245,000	210,000	166,000	152,000
3인	290,000	254,000	198,000	184,000
4인	335,000	297,000	231,000	208,000
5인	346,000	308,000	242,000	218,000
6인	403,000	364,000	276,000	252,000

※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제외

(자가) 주택 노후도 등을 감안하여 설정한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주택개보수

구분		① 생계급여 기준 금액 이하	② 생계급여 기준 금액 초과 ~ 중위소득 35% 이하	③ 중위소득 35% 초과 ~ 중위소득 43% 이하
경보수	378만원(3년)	100% 지원	90% 지원	80% 지원
중보수	702만원(5년)			
대보수	1,026만원(7년)			

- (지급일) (임차) 매월 20일에 수급(권)자의 계좌로 입금, (자가) 보수범위별 수선주기 내 우선순위에 따라 수선

※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임대하는 주택 등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수급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

2. 2018년 8월 13일부터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 수급(권)자, 친족, 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 (방문 장소)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제출 서류)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2. 「소득·재산 신고서」 3.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4. 임대차(전대차)계약서, 5. 통장사본

※ 필요 서식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보장가구 확정, 소득·재산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추가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관련 문의) 신청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3. 신청이 집중되는 초기(8.13~8.24)에는 상당한 혼잡이 예상됩니다.

- 8.13~9.30 기간 내 언제 신청하더라도 동일하게 10월분 급여부터 지급 (8월 말에 신청하더라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처리 기간 등을 고려하여, 11월에 10월분부터 소급하여 지급 가능)

- 신청기간이 충분한 만큼 신청 분산 및 불편 경감을 위해 신청자 분산 관련 지자체 안내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신청기간	1주차 8.13~17	2주차 8.20~24	3주차 8.27~31	4주차 9.3~7	5주차 9.10~14	6주차 9.17~21	7주차 9.24~
가구원	3명 이상	2명	1명				미신청자
수급자연령			40대 이하	50대	60대	70대 이상	

2018년 10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월세를 지원하고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01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 가구입니다.

중위소득 43%

(단위 : 만원/월)



- ☑ 7인 이상 가구 1인 증가시마다 6인가구와 5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6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신청자의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지급
※ 임대차계약서(임차료 지급내용 영수증)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제외

03 자가가구 지원

- 자가가구 지원 내용은?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경·중·대보수로 구분)하여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기준으로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주택의 노후도 평가

현장실사를 통해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평가 (19개 항목)

구조안전(3개 항목)

기초·지반 침하, 지붕 누수, 벽체 균열

설비상태(12개 항목)

부엌, 욕실, 창호, 단열, 급수, 오수, 난방, 내선, 조명 등

마감상태(4개 항목)

벽, 천장, 바닥, 문틀 및 문짝 마감

수선유지급여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지원금액 (주거)	378만원 (3년)	702만원 (5년)	1,026만원 (7년)

※ 장애인은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추가설치(380만원 한도)

※ 고령자(만 65세 이상)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추가설치 (50만원 한도, 19년 1월 시행)

02 임차가구 지원

- 임차가구 지원 내용은?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적은 금액을 지급

기준(또는 실제)임대료 지원

자기부담분 차감하고 지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금액) × 30%

기준임대료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시)	4급지 (그외지역)
1인	213,000	187,000	153,000	140,000
2인	245,000	210,000	166,000	152,000
3인	290,000	254,000	198,000	184,000
4인	335,000	297,000	231,000	208,000
5인	346,000	308,000	242,000	218,000
6인	403,000	364,000	276,000	252,000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 임대료를 10% 증가 (1월 단위 절상)

04 지원절차

- 급여신청 시

①소득·재산 조사와 ②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가구에 지원됩니다.



05 신청장소

-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성공적인 귀어·귀촌, 이 곳에서 준비하세요!

- 8. 10. ~ 12.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2018 귀어·귀촌 박람회'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8월 10일(금)부터 8월 12일(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어촌에서의 삶을 꿈꾸는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2018 귀어·귀촌 박람회'를 개최한다.

귀어·귀촌 박람회는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관련 정책을 홍보하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15년부터 개최되어 온 행사이다. 작년의 경우 상반기 귀어·귀촌 관련 상담 실적이 1,413건이었으나, 박람회('17.6.30~7.2) 이후 하반기 상담 실적이 4,263건으로 크게 증가하는 등 귀어·귀촌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 기여해 왔다.

4회째를 맞이한 올해 박람회는 '청년어촌, 활력바다'라는 주제 아래 해양수산부를 비롯하여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어촌어항협회, 수협 등 귀어·귀촌과 관련된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하여 방문객들에게 풍성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박람회장에는 한국어촌어항협회, 한국농어촌공사 등 홍보·상담 부스와 지자체 홍보부스 등 모두 210개의 부스가 마련된다.

특히, 귀어·귀촌 관련 정부 정책을 확인할 수 있는 '귀어귀촌종합관'과

귀어로 성공한 청년귀어인을 만나볼 수 있는 ‘청년어촌관’, 귀어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귀어닥터상담관’ 등의 전시관도 마련될 예정이다.

특설무대에서는 귀어·귀촌을 원하는 사람이 구체적인 조언을 얻을 수 있도록 어선어업·천해양식·내수면양식·유통·관광 등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의 상담과 강의를 3일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가족 단위의 방문객들을 위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도 풍성하다. 먼저, 10일에는 이덕화 씨가 진행하는 <어촌예찬> 토크콘서트가 열린다. 최근 도시어부에 출연하여 맹활약하고 있는 이덕화 씨는 ‘어촌예찬’을 통해 생생한 어촌 경험을 풀어낼 예정이다.

그 외에도 어촌 살림을 책임지는 어촌계장으로부터 직접 어촌생활 노하우를 듣는 ‘어촌계장 어(漁)울림 토크쇼’, 주민 70명 중 35명이 청년인 어불도 청년어부의 토크쇼, 인문학 강의, 지자체·귀어전문가들의 특별 강연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박람회의 주요일정과 사전참가 신청 등 구체적인 내용은 귀어귀촌 박람회 누리집(www.returnseaexpo.c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사항은 박람회 운영사무국(☎02-6098-0859)으로 연락하면 된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어촌에서 새로운 삶을 꿈꾸시는 분들께 귀어·귀촌을 위한 풍성한 정보들을 제공해 드리려 하니,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 개요

- 일시/장소 : '18. 8. 10(금) ~ 8. 12(일) / aT센타(양재동) 제1전시장(1층)
- 주 제 : “청년어촌, 활력바다”
- 주최/주관 : 해양수산부 / 한국어촌어항협회
- 참 가 : 귀어귀촌종합센터, 한국어촌어항협회,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
- 규모/목표 : 210개 부스 / 관람객 1만명 유치
- 행사예산 : 4억원 * ‘귀어·귀촌 활성화(농특)’ 사업 ‘귀어·귀촌 박람회’ 활용

□ 주요 프로그램

- 귀어·귀촌 정보 안내관 운영
 - 귀어귀촌종합센터, 어촌뉴딜관, 청년기업관, 수협중앙회, 농어촌공사, 어촌체험마을, 다기능어항 등 귀어·귀촌과 관련된 종합 정보안내관 운영
 - 지자체의 특색 있는 귀어·귀촌 정책 홍보를 위한 정보 안내관 운영
- 귀어·귀촌 맞춤 강의 및 상담 운영
 - 지자체 설명회(전남, 충남, 경남), 선배 귀어인의 업종별 성공스토리, 청년어촌계장/청년어부 토크쇼, 정책 및 금융지원 안내, 6차산업 성공사례 안내
 - 귀어닥터의 1:1 맞춤 상담관 운영(10명 상시 운영)
 - * 귀어귀촌 8월 주말교육 운영(100명)
- 어촌과 공감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명사 초청강연(이덕화의 바다예찬, 하동현 작가의 바다 인문학)
 - 클래스(서핑 배우기, 수산물 유통 유명 SNS), 수산물 경매 등
 - * 스탬프렐리 이벤트, 참가자 기념품 증정 등

□ 프로그램 일정표

시간	8월 10일, 금 (1일차)		8월 11일, 토 (2일차)		8월 12일, 일 (3일차)	
	특설무대	상시	특설무대	상시	특설무대	상시
10:00~10:30	공식행사 ① 개막식		지자체 설명회 ③ 충청남도 <충남어촌특화지원센터> 전영미 센터장			
10:30~11:00						
11:00~11:30			토크쇼 ① <청년어촌계장 토크쇼> 공무철 서천송석 계장, 이기혁 중구포내 계장, 김상진 거제다대 계장 (미정)		업종별 귀어스토리 ③ <양식 > 여수 새우궁전 '천재민'	
11:30~12:00						
12:00~12:30	명사초청강연 ① <도시어부 이덕화의 '어촌예찬'>	귀어 귀촌 체험관 및 상담관	클래스 ① <서평 원데이클래스> 해양레저 송정서평학교	귀어 귀촌 주말 교육 귀어 귀촌 체험관 및 상담관	클래스 ③ <인어교주해적단과 함께하는 바다의 맛!> 인어교주해적단	귀어 귀촌 체험관 및 상담관
12:30~13:00						
13:00~13:30			명사초청강연 ② 하동현 작가		업종별 귀어스토리 ④ <수산물유통가공> 조상현	
13:30~14:00						
14:00~14:30	지자체 설명회 ① 전라남도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윤현석 부센터장		토크쇼 ② <어불도로 청년들이 모이는 이유> 어불도 청년어부들		클래스 ④ <6차산업가공유통성공사례> 백미리영어조합법인	
14:30~15:00						
15:00~15:30	업종별 귀어스토리 ① <어선어업> 장용호		업종별 귀어스토리 ② <어촌 비즈니스> 여수 추도 돌담스테이 '김현호'		이벤트(경매쇼) ② <노랑진수산시장 김백수 과장>	
15:30~16:00						
16:00~16:30	지자체 설명회 ② 경상남도 <경남어촌특화지원센터> 김정협 센터장		클래스 ② <금융지원정책> 수협중앙회 임성길 차장, 귀어귀촌종합센터 홍순택 전문위원		이벤트(경품행사) ③ 참가업체 대상 경품 추첨 행사	
16:30~17:00						